

보도자료

담당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통일국제협력팀
전화	3460 - 1185 018-287-1185
E-mail	mjcho@kiep.go.kr

북한경제, 중국 의존도 심해지고 있어

주요내용

- 북한 경제는 날이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국은 여러 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이 2006년 1월 출간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2004년 북-중 무역이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7% (남북교역 포함시 39%)로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했다. 대중국 의존도 증가 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 전년동기대비 무려 43.3%나 폭증했다.
 -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은 △북·일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며 △중국제품의 가격이 싸고 거래 조건 및 물류 등 여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 이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가 장차 한반도 통일경제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대중국 의존도를 대한국 의존도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정하고
 - 이를 위해 현재 남북경제관계를 북·중 경제관계가 가진 유리한 환경보다 더 경쟁력 있는 거래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적용 △물리적 통로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물류, 통행, 통신, 통관 체계 확립 △남북한 자유교역 추진 △남북한 산업의존도 확대 △중국의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전략의 활용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등을 제안했다.

2006. 2. 3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정책 시사점

□ 북한경제에서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 북·중 경제관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2004년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7%(남북교역 포함 시 39%)로,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했다. 대중국 의존도 증가 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무려 43.3%나 폭증하였다.
- 북·중간 무역의 유리한 조건은 변경무역에서 잘 나타난다. 변경무역은 접경 지역간 교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관세우대, 통행, 통관, 통신 등의 신속성, 행정절차의 간편성 등에 힘입어 많은 중국업체들이 선호하는 교역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은 △북·일 관계악화로 대일 수출물량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며 △중국제품의 가격이 싸고 거래 조건 및 물류 등 여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 한편 중국의 대북 투자는 형태도 다양하고,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 2004년 중국의 대북 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했다. 이는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2000년대부터 북한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열기를 보이고, 지난 2004년 중국의 여러 성(省)에서 대북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열기가 확산된 결과다.
 - 중국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 특징은 △첫째, 동북3성과 남방 지역의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다 △둘째, 중국 기업들이 에너지 및 원자재 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자원개발업에 투자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넷째,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형태는 경영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상무역, 합작투자 형태를 주로 취한다 △다섯째, 중국의 지방정부가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로 요약된다.
- 대북한 중국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거

나, 또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에 대부분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지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김일성 주석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루어졌고, 2000년 이후에도 김정일 위원장 및 북한 최고 지도부의 방중 기간 중 경제지원이 크게 이루어졌다.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지원 추이를 보면,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북 지원이 줄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늘고, 반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늘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1% 증가할 때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5%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약 0.112%, 소득은 약 0.1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의해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추정치보다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은 대단히 취약한 편이다.

- 2004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은 15개에 불과한 데 비해 수입특화품목은 78개로 대중국 무역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다.

- 1998~2004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을 보면 무역특화지수가 평균 0.5 이상인 품목은 어패류, 금속광물, 목재, 비단, 골동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

- 반면 같은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입특화품목은 84개로 수출특화품목 12개의 7배나 되고, 이 품목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인 품목 수는 71개에 달한다.

□ 이 보고서는 분석방법으로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하고, 계량분석을 위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중국 단둥, 선양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 및 조사 분석에 따르면 △산업생산 △상품유통 △서비스 및 운송 △금융분야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남북경협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지만, 양적 및 질적 면에서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한 경제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 둘째, 북한과 중국간 경제관계가 밀접한 것은 양국간 제도와 행정 규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대남한 의존도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북·중 경제의 교역 제도 및 규정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정을 구비하여 북한과의 경협에 임해야 한다.
- 셋째, 북·중 경제관계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북·중 무역에서 10개 이상의 무역통상구를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물자의 통관과 검역, 사람의 통행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남북 교역도 다양한 대북 교역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현재 북·중간에는 일반무역과 함께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보따리무역'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존재하는데,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경협도 다양한 거래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 여섯째, 북·중 경제관계에 있어 접경지역인 동북3성 지방정부의 참여도가 대단히 높은데, 이는 지방정부가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일곱째, 북·중 경제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투자부문으로, 우리의 대북경협은 투자 중심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 결국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적용 △물리적 통로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물류, 통행, 통신, 통관 체계 확립 △남북한 자유교역 추진 △남북한 산업의존도 확대 △중국의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전략의 활용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